

3/ 격차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대응과 그 특징*

김지영



경기변동을 들여다보는 직장인

김지영(金知榮)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조교수.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사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화여대 박사후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초청 연구위원을 거쳤다. 주요 연구 분야는 다문화 사회와 사회통합, 일본 지역연구이다. 주요 저작으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부모의 역할」(2020),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정책적 지원 수요에 관한 분석」(2021), 『절망의 유토피아: 내셔널리즘과 천황제로 본 현대 일본』(역서, 2021)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6A3A02102886).

1. '1억층중류사회'에서 '격차사회'로

'1억층중류사회'는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90년대 이전까지 일본 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였다. 내각부가 실시했던 '국민생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상', '중', '중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1970년대 중반에 응답자의 90%를 넘었고 이 결과는 '중류의식'을 가진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후 이러한 '중류의식'을 가진 응답자가 많다는 것은 일본 내에 비슷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로, 더 나아가 일본은 평등한 사회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면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일본 사회에서는 '1억층중류사회'라는 이미지가 정착되어 갔다.¹ 이와 같은 이미지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소득의 평등화를 추구한 일본식 경영시스템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²

그러나 일본 사회의 경제격차를 드러내는 초기의 연구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일본 사회는 결코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없었고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였다.³ 1997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잠시 주춤하였으나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영사업의 민영화는 이미 1980년대 나카소네 정권기부터 추진되고 있었고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이긴 그룹'(勝ち組)과 '패배한 그룹'(負け組)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조명되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사회론이 본격화되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사회의 격차가 대중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던 이유는 격차라는 객관적 사실이 격차감각이라는 주관적 인식에 가려져 사회전반에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1억층중류사회'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는

1 神林博史, 「『総中流』と不平等をめぐる言説: 戦後日本における階層帰属意識に関するノート(3)」, 『東北学院大学教養学部論集』 161号, 2012, 71쪽.

2 森口千晶, 「日本は『格差社会』になったのか: 比較経済史にみる日本の所得格差」, 『経済研究』 68卷 2号, 2017, 20~21쪽.

3 橘木俊詔, 『日本の経済格差』, 岩波書店, 1998.

4 倉満智, 「日本社会における格差の広がりとその対策」, 『香川大学経済政策研究』 第4号, 2008, 24쪽.

일본식 경영시스템이 큰 성공을 거두며 고도경제성장이 지속된 시기로 누구나 노력하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꾸려 나갈 가능성이 높은 시기였기 때문에 대중의 주관적 격차 감각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였다.⁵

이런 점에서 ‘격차사회’라는 말이 ‘1억층중류사회’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일본 사회를 수식하게 된 것이 거품경제 이후 불황이 장기화되는 시점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더욱이 이 시기가 세계화되는 시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정점에 달한 시기였다는 점은 일본 사회의 격차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⁶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서 격차문제가 가시화된 이유를 일본식 경영시스템의 특징에서 살펴보고, 일본식 경영시스템이 붕괴된 이후 격차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폭발적으로 부상하게 된 시점의 특징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일본 사회가 격차문제에 대응해 나간 방식을 정부 정책 및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격차사회론 부상 이후 일본 사회의 변화 양상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격차문제는 왜 2000년대 이후 가시화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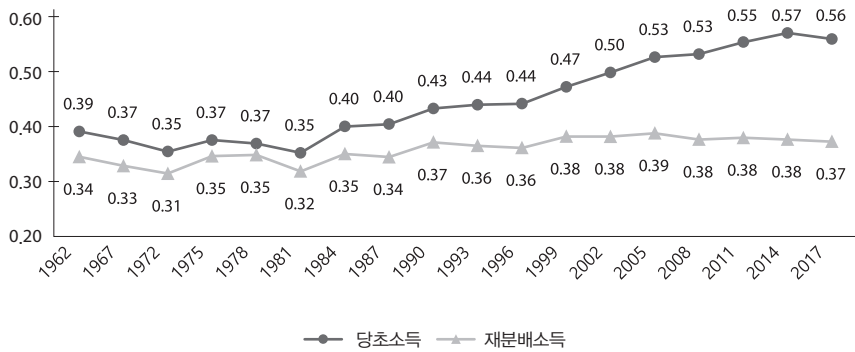
1) 1990년대부터 확대된 객관적 격차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거품경제는 일본의 자산가격을 크게 상승시켰다. 이에 따라 자산소득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자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사이의 임금격차 역시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⁷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재분배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계산한 지니 계수의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1〉), 당초소

5 竹内洋, 「ポスト格差社会論: 信頼社会の構築に向けて」, 関西大学教育学会2006年度研究大会 講演録, 2006, 23쪽.

6 宮本太郎, 『福祉政治: 日本の生活保障とデモクラシー』, 有斐閣, 2008, 142쪽.

7 倉満智, 「日本社会における格差の広がりとその対策」,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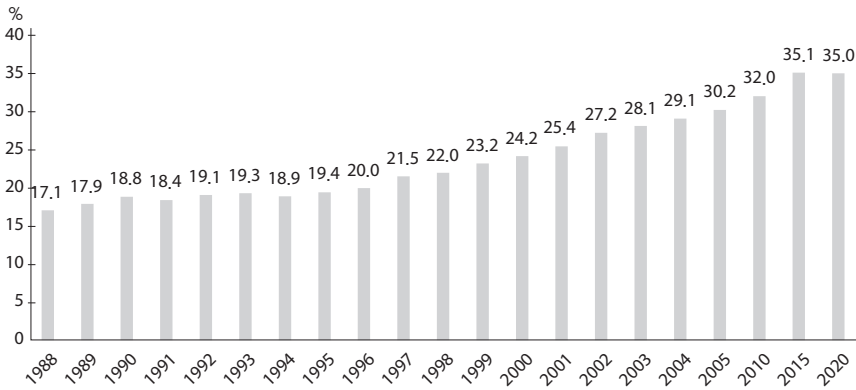
〈그림 1〉 후생노동성 소득재분배조사에서 발표된 일본의 지니 계수 추이

출처: 정부통계 종합창구(e-stat) 소득재분배조사 각 연도 보고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toukei=00450422&tstat=000001024668> (최종검색일: 2021. 11. 19.)

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 계수는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해당하는 1962년부터 1981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재분배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 계수의 경우 당초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 계수에 비해 낮은 수치로 불평등 정도가 크게 완화된 형태를 띠고 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당초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 계수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계화된 시장경제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일본의 대기업이 다국적 기업화를 추진해 나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시장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전환의 구체적인 방침이 되었던 것이 1995년에 발표되었던 ‘새로운 시대의 일본식 경영’이다. 이 방침에는 일본의 노동자를 장기축적능력활용형, 고도전문능력활용형, 고용유연형이라는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노동자파견법이 개정되어 제조업에 대한 파견이 가능해지는 등 노동법제의 규제완화가 추진되었다.⁸

8 福島利夫, 「統計で見る格差・貧困と失業」, 『経済教育』 29号, 2010, 5쪽.



〈그림 2〉 일본의 비정규고용비율 추이(단위: %)

출처: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노동력, 취업, 고용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https://www.jil.go.jp/koku-nai/statistics/timeseries/html/g0209.html>(최종검색일: 2021. 11. 19.)

그 결과 고용불안정의 형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비정규직 고용 비율도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그림 2〉를 보면, 거품경제 시기에 전체의 18%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은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2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30%를 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지니 계수나 비정규직 비율과 같이 소득격차를 드러내는 지표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격차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였다. 격차지표와 격차에 대한 대중의 감각이 이처럼 시간차이를 두고 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2) 객관적 격차를 가리고 있었던 것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장기 고도성장을 이어 오는 동안 ‘평등 신화’를 달성한 것처럼 보였고 대중 역시 ‘1억총중류사회’라는 담론을 믿어왔다.⁹ 고도성장과 평등이라는 얼핏 보기에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요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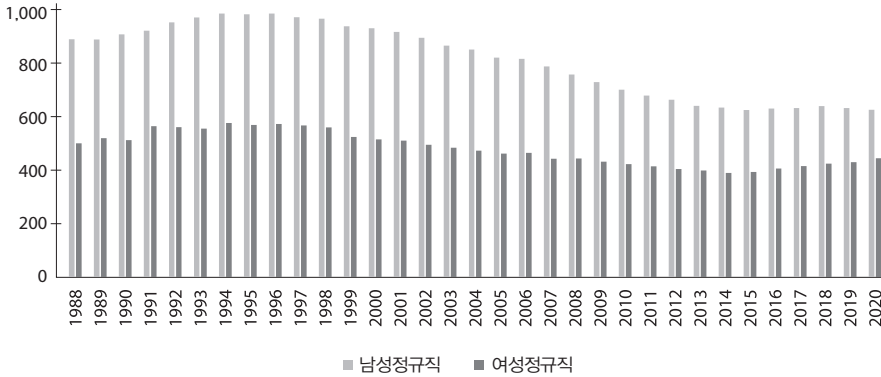
9 盛山和夫, 『『不平等』の何が問われてきたか: 今日の格差論の基底にあるもの』, 『よろん』 102巻, 2008, 10쪽.

오랫동안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식 경영시스템’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식 경영시스템의 근간은 고용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신규대졸자를 일정 기간 안에 일괄적으로 모집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구분하지 않고 일원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셋째,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결성되어 노동조합이 기업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업의 이윤이 노동자의 소득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 노동자의 정기적인 승급과 승진이 보장되면서 고도성장기 동안 일본 사회에는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은 고도성장기 동안 ‘중산계급의 손으로 중산계급을 위한 경제성장’을 실현한 국가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고도성장기에 ‘격차 없는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¹⁰

1990년대 일본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고 소득격차가 증가하고 있었던 시점에도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격차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고 평등주의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까닭은 두터운 중간계급이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식 평등주의는 북유럽 복지국가가 추구해 온 평등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재분배 이전 소득의 평등, 즉, 시장소득에 의한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은 개인을 단위로 하는 소득이 아니라 가구를 단위로 하는 소득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남성 정사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하는 표준적인 가구를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일본식 경영시스템을 통해 달성되었다.¹¹ 이를 위해 고도성장기 동안 일본에서는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에 대한 세금공제, 주부연금 등 부부의 성별에 따른 역할 수행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10 森口千晶, 「日本型人事管理モデルと高度成長」, 『日本労働研究雑誌』 55卷 5号, 2013, 61쪽.

11 森口千晶, 「日本は「格差社会」になったのか: 比較経済史にみる日本の所得格差」, 20~21쪽.



〈그림 3〉 일본의 성별 15~34세 정규직 비율추이(단위: 만 명)

출처: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노동력, 취업, 고용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https://www.jil.go.jp/kokunai/statistics/timeseries/html/g0209.html>(최종검색일: 2022. 1. 4.).

결국 일본의 격차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강화된 시점은 남성 생계 부양자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5세부터 34세의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고용자 수를 비교한 〈그림 3〉을 통해서도 1990년대까지 일본에서 격차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았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남성 정규직 수는 거품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 초반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세가 명확하게 감소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부터이며 1999년 12월 노동자파견법이 개정되어 파견노동의 대상업무가 확대된 이후 감소폭은 더욱 커졌다. 반면, 여성의 경우 그림에서 제시한 15~34세는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시기와 겹쳐 있기 때문에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거품경제 시기 이전부터 남성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격차문제가 소득격차의 확대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소득격차의 확대가 대중의 의식에 보편화되고 공유된 시점은 더 이상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남성 생계부양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 이후로 볼 수 있으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은 객관적인 격차를 드러내는 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생활보장의 주축이 고용보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용형태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곧 가구가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사회안전망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했다.¹² 바로 이런 점에서 일본의 격차문제는 고도성장기 동안 구축된 일본식 고용시스템이라는 안정된 기반에 의해 1990년대까지 가려져 있었지만, 한번 격차문제가 부상한 이후에는 고용분야뿐만 아니라 복지분야까지 문제가 확산되는 형태로 일본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3) 사회문제와 정치문제로 전환된 격차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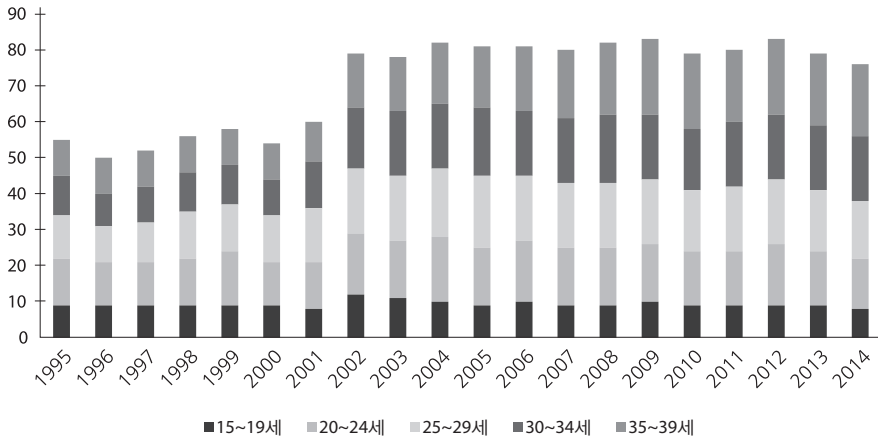
일본식 경영시스템이 추구했던 평등주의는 남성 정사원 고용을 전제로 하여 기업 내에서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처우를 평등하게 하고 어떤 직급에 종사하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여와 지위의 승진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되어 왔다. 이것은 기업 간의 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기업 내의 평등한 처우로 인해 일본인은 자신이 속한 기업 내에서 격차를 느낄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격차문제가 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각자가 속한 기업이라는 경계 안에서 유지되던 평등한 처우의 틀이 붕괴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개인의 고용과 승진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 시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¹³ 경계 내에서의 평등한 처우가 무너진 것은 앞서 언급한 고용형태의 불안정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남성 정사원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일본의 대중이 느끼는 격차 감각은 그 어느 시대보다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객관적인 격차지표를 대중이 일상생활에서 인식할 수 있게 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희망격차’ 논의의 부상(2004년)과 격차문제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2006년)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격차문제가 사회문제와 정치문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희망격차’에 대한 논의는 아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의 저작을 통

12 宮本太郎, 『福祉政治: 日本の生活保障とデモクラシー』, 57쪽.

13 宮本太郎, 『福祉政治: 日本の生活保障とデモクラシー』, 147쪽.



〈그림 4〉 일본 청년무직자 수 추이(단위: 만 명)

출처: 일본 내각부 2015년도판 어린이·청년 백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h27honpen/b1_04_02.html(최종검색일: 2022. 1. 4.).

해 제기되었다. 아마디는 경제적 격차로 대표되는 양적인 격차가 직종, 라이프 스타일 및 지위의 격차와 같은 질적 격차를 낳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개인이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¹⁴ ‘희망격차’ 논의를 통해 일본 사회에서는 2005년 초부터 격차문제가 사회 전반의 논의대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관심이 집중되는 격차문제 영역은 경제, 소득, 임금, 빈곤뿐만 아니라 남녀, 교육, 지역, 노인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희망격차’ 논의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격차문제가 사회문제를 넘어 정치문제로 부상하게 된 시점에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겪은 자의 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내각부의 2015년도판 어린이·청년 백서(子供·若者白書)에서 공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15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 가운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의 수는 1995년 55만 명 정도로 1999년까지 소폭의 상승은 있었으나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청

14 山田昌弘, 『希望格差社会: 「負け組」の絶望感が日本を引き裂く』, 筑摩書房, 2004.

년무직자 수는 일본식 고용시스템이 큰 변화를 겪었던 1990년대 말에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1년에 처음으로 60만 명을 돌파하였고 ‘희망격차’ 논의를 통해 격차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던 2004년에는 이미 82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었다.

‘희망격차’ 논의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미래의 삶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현대 일본 사회가 ‘위험’과 ‘양극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였다. 여기서 ‘위험’이란 단어의 성격은 격차문제의 성격을 잘 규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언급하는 ‘위험’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서 개인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양극화는 위험에 대한 대처의 결과물을 의미하는데 ‘희망격차’ 논의에서는 위험을 대처하는 단위가 가족에서 개인으로 바뀌게 된 것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가족자원이 풍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개인별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관계적·물질적 자원이 다르다는 점은 개인 간 격차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양극화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개인이 위험에 대처한 결과는 개인 간의 격차로 이어지며 교육이나 직업선택과 같이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부문에서 선택을 실패할 경우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격차는 한번 발생하면 고정되는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격차문제가 정치문제로 부상하게 된 주요한 사건으로 격차문제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을 들 수 있다. 격차문제는 이미 2004년 말부터 ‘희망격차’ 논의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제였으며 고이즈미 정권기 동안 국회의 예산위원회에서도 소득격차, 의료격차, 지역격차, 빈부격차에 대한 논의가 2003년부터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가 고이즈미 정권의 시장주의적 구조개혁을 통해 확대되고 있

다는 것은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적이 있으나 2006년 이전까지 고이즈미 총리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일관되게 앞으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답을 내놓으며 격차 확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권 말기에 해당하는 2006년 1월 26일에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경제격차의 확대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지니 계수를 통해 보면 일본 사회에서 격차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처음 피력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전략)사회의 격차문제에 대해 최근 지니 계수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중략) 제가 학생이었을 때 지니계수라는 단어는 거의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니 계수란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다양한 통계 데이터가 있지만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저와 같은 지식인이 제대로 들여다보면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일본 사회에 격차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리터(フリーター)나 니트(ニート), 정규직으로 장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는,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프리터와 니트라고 하면서 의욕 자체가 없는, 일을 하지 않아도 어찌되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프리터, 니트라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격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후략)¹⁵

이어 2월 1일에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구조개혁으로 인해 지역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과 같이 발언하여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나쁘다고 보지 않으며 자조와 자율의 정신이 어느 시대의 어느 국가에서도 중요한 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5 衆議院, 第164回国会予算委員会第2号.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a.nsf/html/kaigirokua/001816420060126002.htm (최종검색일: 2021. 11. 18.).

(전략)저는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악평등’이라는 비판이 많았죠. 능력 있는 자가 노력하면 보상받는 사회, 이것은 총론적으로 여야당을 막론하고 이런 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도 국가도 지역도 개인도 자조와 자율이라고 해야 할까요?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 스스로를 돕는 정신, 자조 정신, (중략) 자신을 다스리는 정신, 스스로를 다스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른바 자조와 자율은(중략) 어느 시대의 국가, 지역, 사회, 개인에게도 변함없는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략)¹⁶

그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내각부에서는 격차의 확대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눈가림 현상이라는 견해를 공표하여 격차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내각부의 공표는 당시 일본에서 나타나는 격차문제가 인구 고령화에 기인한다는 논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집단 간의 소득 불평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구구성이 고령화될수록 사회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같은 연령이나 학력집단에서 보면 불평등 수준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¹⁷ 이처럼 격차문제를 인구구성의 고령화에 둘 경우 정부가 격차문제에 관여할 여지는 매우 줄어들게 되며 격차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역시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인구 고령화설을 지지한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¹⁸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과 내각부의 격차에 대한 견해 공표를 계기로 이를 비판하는 보도와 격차 문제에 대한 특집이 마련되어 격차문제가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¹⁹ 격차문제에 대한 반론이 확산되었고, 격차사회에 대한 책이 다수 출판되어 소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

16 参議院, 第164回国会予算委員会第2号.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6415261X00220060201¤t=24>(최종검색일: 2021. 11. 18.).

17 竹内洋, 「ポスト格差社会論: 信頼社会の構築に向けて」, 『教育科学セナリー』 38卷, 2007, 24쪽.

18 岩間暁子, 「『格差論』の現在と家族・労働・福祉: 「中流論争」との比較から」, 『和光大学現代人間学部紀要』 1号, 2008, 186쪽.

19 島崎哲彦 等, 「新聞報道からみる格差社会」, 『東洋大学社会学部紀要』 48卷 1号, 2010, 47쪽.

반 대중이 격차문제에 대해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격차문제에 대한 담론이 일본 사회에 침투되면서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생활제일’을 주창하며 격차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표방했던 민주당이 압승하게 되었다.²⁰ 이와 같은 흐름은 격차문제가 일본 사회의 정치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였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3. 일본 사회는 격차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1) 격차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격차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는 것은 격차문제가 일본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실제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본정부 정책의 현황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백서에서 격차문제가 다뤄지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200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격차문제에 대응해 나간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정부의 핵심기관인 내각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백서에는 총 열 종류가 있으며 이 가운데 국민생활백서는 2008년 이후 발간이 중단되어 현재는 아홉 종류의 백서가 발간되고 있다. 그중 격차문제가 언급된 백서와 언급 내용을 정리한 <표 1>을 보면, 국민생활백서에서 격차문제가 가장 먼저 언급되었고 고령세대의 소득, 남녀 간 임금격차,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임금격차와 혼인과의 관계에 대해 폭넓게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과 2004년 역시 남녀공동참획백서(男女共同参画白書)와 국민생활백서에서 임금격차의 문제가 지적되어 초기의 격차문제가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宮本太郎, 『福祉政治: 日本の生活保障とデモクラシー』, 149쪽.

〈표 1〉 일본 내각부가 발행한 백서의 종류 및 격차문제 언급 현황(2000~2008)

연도	백서종류	언급 요지
2001	국민생활백서	고령세대는 소득격차가 큼, 남녀의 임금격차는 풀타임 노동자의 경우 축소되고 있음, 여성 풀타임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2003	남녀공동참획백서	남녀 간 임금격차, 일본의 남녀 간 임금격차 요인
	국민생활백서	확대되는 수입격차
2004	남녀공동참획백서	남녀 간, 여성의 고용형태별 급여격차의 추이
2005	남녀공동참획백서	남녀 간, 여성의 고용형태별 급여격차의 추이
	국민생활백서	남녀 간의 경제격차 축소 등에 의해 분업의 메리트가 희박해짐, 양육세대 간 소득격차, 젊은 층에서 파트 및 아르바이트가 증가하여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격차의 고정화를 피하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실현
2006	경제재정백서	가계로 본 경제적 격차
	남녀공동참획백서	남녀 간, 여성의 고용형태별 급여격차의 추이
2007	경제재정백서	경제성장과 격차의 관계
	고령사회백서	고령자세대 1인당 소득은 전 세대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고령자세대 간 소득격차는 크게 나타남
	남녀공동참획백서	남녀 간, 여성의 고용형태별 급여격차의 추이
2008	고령사회백서	고령자세대 간 소득격차는 크지만 사회보장급부 등 재분배에 의해 개선
	남녀공동참획백서	남녀 간, 여성의 고용형태별 급여격차의 추이

주: 내각부 홈페이지 자료(최종검색일: 2021. 10. 22.)를 토대로 필자 작성
(<https://www.cao.go.jp/whitepaper/index.html>).

그러나 ‘희망격차’ 논의가 급부상했던 2005년의 국민생활백서에서는 소득격차의 문제가 개인의 미래설계에 대한 희망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당시 일본 사회에서 격차문제에 대한 인식이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확장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05년에 발행된 국민백서에서는 격차가 고정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전략) 경쟁사회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반드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저소득자가 희망을 상실하여 일할 의욕이 저하되는 것으로 인해 사

회계층의 고정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노력해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바꾸어 제도 전이 가능한 사회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후략)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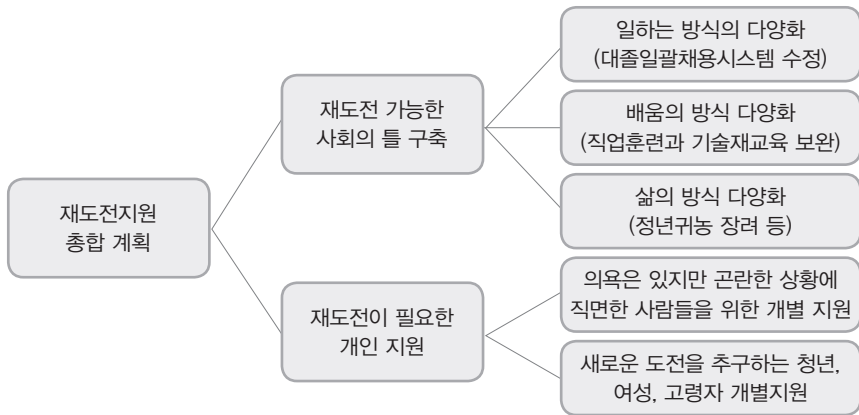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파트타임 노동자와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자를 정규직과 균형을 맞추어 대우할 수 있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둘째, 비정규직의 직업 능력과 기술 발전, 커리어 향상을 위한 기회창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격차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일관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2006년에 격차문제를 다룬 경제재정백서에서는 현재의 격차 현황을 인정하면서도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세대인원의 축소나 고령자 세대 증가에서 찾고 있어 2005년 국민생활백서와는 전혀 다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2007년에 발행된 경제재정백서에서는 격차확대 현상이 인구동태, 세계화, IT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저소득자에게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서구에서 효과를 얻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²²

아베 정권기에 ‘재도전 지원 총합 계획’(再チャレンジ支援総合プラン)으로 구체화된 정부의 대응책은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의 틀을 구축하는 정책과 재도전이 필요한 개인을 지원하는 개별지원책의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의 틀을 구축하는 정책은 일하는 방식과 배움의 방식 그리고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단선적

21 内閣府, 2005年国民生活白書.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9990748/www5.cao.go.jp/seikatsu/whitepaper/h17/01_honpen/html/hm02020301.html(최종검색일: 2021. 11. 19.).

22 内閣府, 2007年経済財政白書. <https://www5.cao.go.jp/keizai3/2007/0807wp-keizai/setsumei03.pdf>(최종검색일: 2021. 11. 19.).



〈그림 5〉 격차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 종합 계획'의 전체상

출처: 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2006년 5월 30일 재도전 지원 종합 계획 공표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https://www.kantei.go.jp/jp/singi/saityarenzi/gaiyou.pdf>(최종검색일: 2021. 11. 24.).

방식에서 복선적 방식(複線化)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별지원책에서는 사업실패, 직장복귀, 재취업,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도전, 단카이 세대의 정년 후 재도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핵심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기업에서는 단기 노동을 주로 경험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전문적 기술을 함양한 것과는 거리가 먼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규직과 같은 장기 고용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조직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편견을 가지는 한계가 있었다.²³ 더욱이 '재도전 지원 종합 계획'은 1년 남짓 되는 아베 정권 1기에 한정적으로 실시되었고 후쿠다 정권기에 들어 '재도전 지원 종합 계획'을 전담하던 내각관방 재도전 담당실(内閣官房再チャレンジ担当室)이 2008년 폐지되면서 정책의 지속성도 담보되지 못했다.

23 倉満智, 「日本社会における格差の広がりとその対策」, 30쪽.

2) 격차문제에 대한 학문적 대응

격차문제가 사회문제 및 정치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격차사회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학술연구도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 사회가 격차사회로 바뀌어 간다는 것은 격차가 확대되는 사회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은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인 격차가 확산되는 것, 격차의 확산이 현저하게 나타나면서 대중의 의식에서 보편화되는 것, 고용격차, 교육격차, 건강격차, 결혼격차, 지역격차 등 격차가 확대되는 영역 자체가 늘어난다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²⁴

격차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일본 사회의 격차문제를 다룬 학술연구는, 격차사회라는 말이 미디어에서 유행하여 여론의 관심을 크게 받는 동안 학문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여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격차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격차의 영역에 대한 고찰이고, 다른 하나는 격차문제를 통해 형성된 ‘격차사회론’을 분석하면서 일본의 계급과 계층 연구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학문적인 성찰이었다.

먼저,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격차의 성격이 단순히 경제적 격차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격차문제에서 다루어진 격차의 성격은 단순히 소득의 차이를 드러내는 양적인 격차가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이나 정규직 고용과 같은 질적인 격차를 포함하고 있다. 즉, 격차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격차의 본질은 계층이 고정화, 분단화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계층의 차이를 넘어 계급의 대립을 초래하는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²⁵

더욱이 격차문제를 다루는 논의에서는 격차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욕과 절망감 같은 심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격차 이외에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과 같은 가족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자

24 福島利夫, 「統計で見る格差・貧困と失業」, 5쪽.

25 福島利夫, 「統計で見る格差・貧困と失業」, 5쪽.

신의 노력 이외의 부분에서 결정되는 격차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 역시 격차가 심리적인 측면에 미친 영향이 컸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²⁶ 앞서 언급한 ‘희망격차’는 격차가 심리적 수준에서 작동하고 심리적 격차가 개인의 장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드러낸 대표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격차문제가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은 격차문제가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격차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룬 프리터, 니트, 끊임없이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working poor)의 문제, 교육분야의 학교선택제도, 취학지원을 받는 아동이 급증하는 문제 등은 대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였다. 특히 워킹푸어 문제를 다룬 NHK 스페셜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 번의 시리즈로 방영되었고 취재의 기획과정과 방송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책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²⁷ 이처럼 격차가 드러나는 영역이 포괄적이고 격차가 의미하는 바가 양적인 지표부터 심리적인 지표까지 다양한 층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격차문제에 관한 논의는 일본 사회에서 다양한 각도로 재생산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격차사회라는 말을 통해 일본에서 이루어진 계급과 계층 연구를 성찰하고 일본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격차사회는 격차가 이전보다 커진 사회라는 뜻을 가지는데 격차사회론이 부상한 시기에 일본에서는 단순히 양적인 차이가 있다는 의미밖에 가지지 않는 격차라는 단어가 명확한 사회과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계급 또는 계층이라는 말보다 많이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사회계층 및 계급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격차사회론을 본래의 계급 계층론과 연결 지어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와타나베 마사오(渡辺雅男)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다양한 계

26 山田昌弘, 『希望格差社会: 「負け組」の絶望感が日本を引き裂く』.

27 岩間暁子, 「「格差論」の現在と家族・労働・福祉: 「中流論争」との比較から」, 187쪽.

층격차를 가진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1억층중류’ 담론과 같은 평등지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논의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즉, 격차사회론이 일본에서 격차를 은폐하는 시스템이나 허구의 의식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이미지의 비현실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⁸

이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가 본질적으로 격차사회(계급사회)이면서도 외형상으로는 평등사회(시민사회)라는 점에 주목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사회에서 평등원리가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었던 원인을 고도성장기의 도래로 보고 있다. 고도성장기 동안 일본에서는 사회의 불평등을 배제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일본 사회는 능력이 있으면 사회이동이 가능한 사회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1980년대 이후부터 학력의 가치가 학교의 서열로 전위되고 학력의 세습이 진행되면서 사회의 불평등 의식이 강화되었다. 일본 사회가 더 이상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노력해도 상승 이동할 수 없는 사회가 된 이후 불평등 의식이 강화되면서 사회의 응집성은 크게 후퇴하였고 격차사회는 현대 사회의 평등기제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⁹

한편으로는 일본의 계층을 연구하는 사회학적 연구가 격차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격차문제를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점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졌다. 이 점을 비판한 사토 요시미치(佐藤嘉倫)는 일본의 계급 및 계층 관련 연구가 세대 간 및 세대 내의 사회이동의 형태와 유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나머지 계급 간에 존재하는 경제격차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을 다루는 일본의 계층 및 계급연구의 대부분은 정규직 고용을 암묵적인 전제로 해 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³⁰ 하시모토 겐지(橋本健二)의 경우 경

28 渡辺雅男, 「格差社会の中の階級」, 『経済科学通信』 108卷, 2005, 32쪽.

29 渡辺雅男, 「格差社会の中の階級」, 32쪽.

30 佐藤嘉倫, 「格差社会論と社会階層論: 格差社会論からの挑戦に依て」, 『季刊経済理論』 44卷 4号,

계격차를 중심으로 다룬 경제학적 연구 역시 개인과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통계를 한 시점에서 다루며 격차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계급과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격차와 시계열의 격차는 일본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오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분석하며 격차사회론이 아닌 계층계급론의 관점에서 격차문제가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¹

일본의 격차문제를 다룬 ‘격차사회론’은 비정규 고용자와 정규 고용의 수입차이가 절대적 격차를 만들어 낸다는 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일본의 사회계층론에 새로운 연구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이 글의 목적은 2000년 이후 일본의 격차문제가 사회문제 및 정치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일본 사회가 격차문제에 대해 대응한 방식과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앞선 논의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의 격차문제는 거품경제 이후 경기가 장기 침체되는 상황에서 급부상하였고 일본 사회가 오랫동안 신화로 간직하고 있던 ‘1억층중류사회’의 신념을 대체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격차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한때 급부상한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일본 사회에 정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격차문제가 일본 사회에 정착하게 된 과정에 주목하였으며 일본 사회에서 격차를 드러내는 지표가 1990년대부터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격차 의식이 2000년 이후부터 보편화된 이유를 일본식 경영시스템의 붕괴와 연결 지어 분석하였다.

2008, 27쪽.

31 橋本健二, 「『格差社会論』から『階級: 社会階層研究』へ」, 『社会学評論』59卷 1号, 2008, 98쪽.

또한 일본의 격차문제가 사회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희망격차’ 논의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격차문제가 정치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을 되짚어 보면서 일본의 격차문제가 크게 부상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격차문제가 일본의 사회 및 정치문제로 전환된 이후 일본의 정책과 학문분야가 격차문제에 대응해 나간 방식과 특징을 추적하면서 격차문제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본 사회가 격차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객관적인 격차지표가 1990년대부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격차문제가 2000년 이후 가시화되었던 이유는 일본식 경영시스템의 붕괴가 1990년대 말부터 일어났기 때문이다. 일본은 거품경제 이후 장기경기침체를 겪으며 지니 계수나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변화를 대중이 체험하기 시작한 시점은 일본식 고용제도가 붕괴된 1990년대 말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파견업무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구를 단위로 하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붕괴되었다. 일본의 격차문제는 남성의 정사원 비율이 급감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 이후 가시화되었다.

둘째, 격차문제는 ‘희망격차’ 논의와 고이즈미 정권의 정책노선의 영향으로 가시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정치적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희망격차’ 논의는 고용의 안정화가 크게 약화된 결과 일본 사회의 위험과 양극화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경제적인 격차가 심리적 격차와 장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격차까지 이어진다는 논의는 대중의 격차 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격차 자체를 부정한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과 격차가 고령화된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눈가림 효과라는 내각부의 공표는 일본 사회에서 격차문제가 정치문제로 부상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아베 정권(1차)에 들어 시도되었으나 집권 기간이 1년 남짓으로 짧았던 점과 후

куда 정권이 이를 계승하지 않았던 점에서 일본 사회의 격차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격차문제는 일본의 계급 및 계층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이제까지 일본의 계급 및 계층 연구는 세대 간 또는 세대 내에서 사회이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계급 간에 존재하는 경제 격차에 대해 연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회이동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격차사회론’이 제기한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격차사회론’은 고용의 형태와 격차의 고정화라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일본 사회의 계급 및 계층론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 주었다.

이 글의 의의는 일본에서 격차문제가 사회적·정치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직간접적 배경과 격차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및 학계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격차문제가 일본 사회에 던진 메시지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일본 사회에서 격차문제가 부상하는 맥락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격차문제로 촉발된 ‘격차사회론’ 자체의 전개 과정이나 일본 사회에서 분야별 격차가 확대되는 과정, 또는 격차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집단이나 세대 또는 지역 등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이 글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격차문제의 부상 과정이 신문과 뉴스 및 일본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미디어의 영향과 밀접한 관계³²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못했다. 격차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정착되어 가는 과정과 미디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미디어에서 표상되는 격차의 형태와 특징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32 島崎哲彦 等, 「新聞報道からみる格差社会」, 47쪽.

濱口桂一郎,『ジョブ型雇用社会とは何か: 正社員体制の矛盾と転機(岩波新書 新赤版 1894)』, 岩波書店, 2021.

濱口桂一郎,『若者と労働: 「入社」の仕組みから解きほぐす』, 中央公論新社, 2013.

浜中義隆,「1990年代以降の大卒労働市場」, 荻谷剛彦・本田由紀 編,『大卒就職の社会学: データからみる変化』, 東京大学出版会, 2010.

福井康貴,『歴史のなかの大卒労働市場: 就職・採用の経済社会学』, 勁草書房, 2016.

本田由紀,「日本の大卒就職の特殊性を問い直す」, 荻谷剛彦・本田由紀 編,『大卒就職の社会学: データからみる変化』, 東京大学出版会, 2010.

小山治,「なぜ企業の採用基準は不明確になるのか」, 荻谷剛彦・本田由紀 編,『大卒就職の社会学』, 東京大学出版会, 2010.

격차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대응과 그 특징 | 김지영

岩間暁子,「『格差論』の現在と家族・労働・福祉: 「中流論争」との比較から」,『和光大学現代人間学部紀要』1号, 2008.

神林博史,「『総中流』と不平等をめぐる言説: 戦後日本における階層帰属意識に関するノート(3)」,『東北学院大学教養学部論集』161号, 2012.

倉満智,「日本社会における格差の広がりとその対策」,『香川大学経済政策研究』第4号, 2008.

佐藤嘉倫,「格差社会論と社会階層論: 格差社会論からの挑戦に答えて」,『季刊経済理論』, 1月, 2008.

島崎哲彦・大谷奈緒子・小川祐喜子,「新聞報道からみる格差社会」,『東洋大学社会学部紀要』48巻 1号, 2010.

盛山和夫,「『不平等』の何が問われてきたか: 今日の格差論の基底にあるもの」,『よろん』102巻, 2008.

竹内洋,「ポスト格差社会論: 信頼社会の構築に向けて」,『教育科学セミナー』38巻, 2007.

橋本俊詔,『日本の経済格差』, 岩波書店, 1998.

橋本健二,「『格差社会論』から『階級: 社会階層研究』へ」,『社会学評論』59巻 1号, 2008.

福島利夫,「統計で見る格差・貧困と失業」,『経済教育』29号, 2010.

宮本太郎,『福祉政治: 日本の生活保障とデモクラシー』, 有斐閣, 2008.

森口千晶,「日本型人事管理モデルと高度成長」,『日本労働研究雑誌』55巻 5号, 2013.

森口千晶,「日本は『格差社会』になったのか: 比較経済史にみる日本の所得格差」,『経済研究』68巻 2号, 2017.

山田昌弘,『希望格差社会: 「負け組」の絶望感が日本を引き裂く』, 筑摩書房, 2004.

参議院, 第164回国会予算委員会第2号,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6415261X00220060201¤t=24>(최종검색일: 2021. 11. 18.).

衆議院, 第164回国会予算委員会第2号,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a.nsf/html/kaigirokua/001816420060126002.htm(최종검색일: 2021. 11. 18.).

首相官邸, 再チャレンジ推進中間とりまとめ, <https://www.kantei.go.jp/jp/singi/saityarenzi/gaiyou.pdf>(최종검색일: 2021. 11. 24.).

政府統計の総合窓口, 所得再分配調査,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toukei=>

00450422&tstat=000001024668(최종검색일: 2021. 11. 19.).

内閣府, 2005年国民生活白書,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9990748/www5.cao.go.jp/seikatsu/whitepaper/h17/01_honpen/html/hm02020301.html(최종검색일: 2021. 11. 19.).

内閣府, 2007年經濟財政白書, <https://www5.cao.go.jp/keizai3/2007/0807wp-keizai/setsumei03.pdf>(최종검색일: 2021. 11. 19.).

内閣府, 2015年版子供・若者白書,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h27honpen/b1_04_02.html(최종검색일: 2022. 1. 4.).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各年齢階級の正規, 非正規別雇用者数, <https://www.jil.go.jp/kokunai/statistics/timeseries/html/g0209.html>(최종검색일: 2021. 11. 19.).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男女別各年齢階級の正規・非正規別雇用者数, <https://www.jil.go.jp/kokunai/statistics/timeseries/html/g0209.html>(최종검색일: 2022. 1. 4.).

일본 중등교육체계의 변동과 교육격차 | 최가영

岡部恒治・西村和雄・戸瀬信之 編, 『分数ができない大学生: 21世紀の日本が危ない』, 東洋經濟新報社, 1999.

冲裕貴, 「学力低下論争」を振り返って: 「現代の教育」の講義と受講生との議論から, 『立命館高等教育研究』 11号, 2011.

刈谷剛彦・志水宏吉, 『学力の社会学: 調査が示す学力の変化と学習の課題』, 岩波書店, 2004.

多喜弘文, 「社会經濟的地位と学力の国際比較: 後期中等教育段階における教育と不平等の日本的特徴」, 『理論と方法』 23(2), 2010.

国立教育研究所 編, 『理科教育の国際比較』 第一法規, 1993.

猿田祐嗣, 「TIMSS調査あらみた学力格差」, 『国立教育政策研究所紀要』 第147集, 2018.

中西祐子・中村高康・大内裕和, 「戦後日本の高校間格差成立過程と社会階層: 1985年SSM調査データの分析を通じて」, 『教育社会学研究』 第60集, 1997.

西村幹子, 「ゆとり教育下における私立中学生の親の態度と行動分析: 教育費と学校選択に注目して」, 『大学教育研究』 第4号, 2006.

日野純一, 「教育制度の分岐かについて」, 『京都産業大学教職研究紀要』, 2017.

福地誠, 『教育格差絶望社会』, 洋泉社, 2006.

藤村正司, 「後期中等教育の比較制度分析: PISA2015から『日本の特徴』を再考する」, 『教育学研究』 第86集, 2019.

ベネッセ教育総合研究所, 『学校外教育活動に関する調査』, 2017.

前川史彦, 「日本における教育格差: プルトップ型教育がもたらしたもの」, 『香川大学經濟政策研究』 第7号, 2011.

松下佳代, 「PISAで教育の何が変わったか: 日本の場合」, 『教育テスト研究センター CRETシンポジウム報告書』, 2010.

文部科学省, 『学校基本調査』, 2020.

横井敏郎, 「高校教育改革政策の論理とその課題」, 『国立教育政策研究所紀要』 第138集, 2009.

中央教育審議会, 「21世紀を展望した我が国の教育の在り方について(第一次答申)」 1996. <http://>

러내는 데 맞춰졌다. 국면별로는 인물, 학력, 잠재능력이 선발의 능력 기준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대졸노동시장, 대졸고용제도, 직업능력, 인물, 학력, 잠재능력

격차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대응과 그 특징 | 김지영

이 글의 목적은 2000년 이후 일본의 격차문제가 사회문제 및 정치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일본사회가 격차문제에 대해 대응한 방식과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문헌자료와 일본정부의 통계자료, 내각부의 백서, 참의원과 중의원의 회의록 자료를 바탕으로 격차문제가 2000년 이후에 가시화된 이유와 격차문제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대응 양상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인 격차지표가 1990년대부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격차문제가 2000년 이후 가시화되었던 이유는 일본식 경영시스템의 붕괴가 1990년대 말부터 일어났기 때문이다. 일본의 격차문제는 남성의 정사원 비율이 급감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 이후 가시화되었다. 이는 객관적 격차지표와 대중의 격차 감각 사이의 시차를 낳은 주요한 요소다. 둘째, 격차문제는 ‘희망격차’ 논의와 고이즈미 정권의 정책노선의 영향으로 가시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정치적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격차가 심리적 격차와 장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격차까지 이어진다는 ‘희망격차’ 논의는 대중의 격차 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격차 자체를 부정한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과 격차가 고정화된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눈가림 효과라는 내각부의 공표는 일본사회에서 격차문제가정치문제로 부상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셋째, 격차문제는 일본의 계급 및 계층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작지 않다. 일본의 격차문제는 일본식 고용제도가 갖는 한계를 드러내고 격차의 고정화라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일본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낸 계기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격차사회, 희망격차, 고이즈미 정권, 1억층중류사회

일본 중등교육체계의 변용과 교육격차 | 최가영

본고에서는 일본의 중등교육의 교육체계와 교육격차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교육격차의양상을 PISA 결과를 통해 검토하고, 일본의 교육제도의 특징이 2000년대 이후 출신배경에 따른 학력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은 다양한 학생에의 대응과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되어 추진되었지만, 학교의 새로운 계층분화의 근거를 가지고 오는 변화로 이어진 점을 알 수 있다. 당초 교육개혁은 학생들의 선택지를 증가시켜, 학교서열의 완화를 가지고 올 것을 목표로 했지만 학교 간 분산을 좁히지는 못하였으며, ‘학교 간의 학생의 성취도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계는 두드러지게 큰 수치를 보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학력상승이 일어난 2006년과 2015년의 시점의 PISA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적과의 관계가 더 강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PISA의 결과는 고등학교1학년(1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학력격차를 고등학교의 학교 효과로 해석하기보다는 선발제도의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성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과정(중등교육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 진학 단계)에서 학생의 사회경제문화적인 요인과 진학하는 학교 서열과 밀접

Recently, in South Korea, the demand for meritocracy and fairness has expanded beyond social controversy to political agenda. The employment of college graduates is the critical point where that demand is most sensitively conflicted. This paper examines the method by which vocational ability is defined in the Japanese college graduate labor market as a reference point for relativizing the controversy in Korea. For this, I analyze the process by which the image of ability has been constructed by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Japanese college graduate recruitment system. The focus of the analysis is to show the institutional process in which vocational ability has been defined a selection criterion.

• **Keywords:** meritocracy, labor market, college graduate, recruitment system, vocational ability

Characteristics of Japan's Response to the Problem of Disparity

| KIM JiYo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way Japanese society responded to the disparity problem by examining the process by which the disparity problem in Japan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ocial and political problem since 2000. For this purpose, in this paper, based on literature data, statistical data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alyzed the reasons why the disparity problem became visible after 2000 and the policy and academic responses to the disparity problem.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ason Japan's disparity problem became visible after 2000 despite the fact that objective disparity indicators deteriorated from the 1990s is because the collapse of the Japanese-style management system started in the late 1990s. In Japan, the problem of disparity became visible after the late 1990s when the ratio of male full-time employees began to drop sharply. Second, the disparity problem was visualiz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discussion on the 'gap of hope' and the policy lines of the Koizumi administration, and through this, it emerged as a socio-political problem. Third, the disparity problem is not small in that it played a role in giving a new perspective to Japanese class studies. The disparity problem in Japan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eveal the limitations of the Japanese-style employment system, draw attention to the issue of fixation of the gap, and strongly emphasize the need to redefine the direction of Japanese society.

• **Keywords:** a society of disparity, Gap of hope, Koizumi administration, the consciousness that almost all people belong to middle-class

Transformation of the Japanese Secondary Education System and the Educational Gap | CHOI Gayoung

This paper examined the aspects of the education gap by analyzing PISA results from 2003 to 2018,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s secondary education system and the education gap. By doing that, this study scrutinized how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education system affected the differences in educational performance by one's background.